

1930년대 진주읍회·진주부회의 구성과 성격

노 규 선*

- I. 머리말
 - II. 진주읍회의 구성과 읍회의원 활동
 - III. 진주부회의 승격과 부회 활동의 좌절
 - IV.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진주 내 지역엘리트로 구성되었던 읍회·부회의 활동 양상을 살펴보고, 지역개발 논의 과정에 주축으로 참여했던 의원들의 구성과 활동을 통해 진주읍·부회의 특성과 변화상을 검토하는 것이다. 읍회와 부회의 활동은 조선총독부의 지배체제 아래에서 제한적·형식적으로 전개되는 측면이 많았지만, 진주에서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협력체계가 비교적 오랫동안 전개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 기간에 읍·부회는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면서 기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주는 일제강점기가 된 이후 전통 도시로의 위치를 위협받았

* 경북대학교 사학과 박사수료 / 경북대학교 사학과 4단계 BK21 사업 참여대학원생(ain aercee@naver.com)

고, 이러한 위협은 부로의 지정 실패와 1924년 진주 내 경남도청의 부산 이전으로 가시화된다. 이에 진주에 오랜 기간 거주해 온 조선인뿐만 아니라 진주 내 기반을 중점으로 활동하던 일본인들은 적극적으로 협력해 도청 이전을 반대하였다. 이 같은 사건은 지역 내 조선인과 일본인들이 협력관계를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구성된 읍회에서는 지역의 발전이 당면 과제로 부상하면서 지역엘리트로 구성된 조일 의원들은 지역 현안의 해결을 위해 일정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둘째, 진주는 1939년 도시의 성장을 통해 부로서의 승격이 이루어졌고, 이후 선거에 나선 지역엘리트들은 지역개발에 자신이 이바지하고자 하는 바를 공약으로 발표하는 선거운동에 나섰으며, 당선된 이들은 해당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부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하지만 전시 체제기라는 특수한 상황의 강화로 인해 지역 내 개발을 모색할 방법이 점차 사라졌고, 총독부에 의해 비교적 ‘자치’ 기관에 가까웠던 부회의 선거 방식이 추천제로 변경되면서 조일 의원 간의 협력과 이들로부터 비롯된 지역개발 시도는 좌절되었다. 선출된 의원들은 일제의 전쟁 수행에 동조하고 이를 선전하는 기구로 부회를 변질시켰다.

◆ 주제어

진주, 읍회, 부회, 지역 정치, 지역엘리트

I. 머리말

1919년 3·1운동 이후 일제는 식민지 조선에 대한 유화책의 일환으로 ‘문화정치’를 내세우면서 그 방침 중 하나로 도에는 평의회를 부·면 단위에는 협의회를 설치하겠다고 천명하였다.¹⁾ 당시 평의회와 협의회는 각 지역의 자문기관으로 규정되어 조례나 예산 등을 자문하였다. 그중에서도 1920년부터 부와 일부 면에서는 주민 직선제를 도입해 의원 선거를 시행했다. 하지만 해당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부세 혹은 면의 부과금 연액 5원 이상을 납부하는 25세 이상 남자로 제한되었다.²⁾ 더불어 결정된 자문 사항을 따를 의무는 없었기에 이는 해당 기관의 목표로서 총독부가 주장한 ‘민의를 창달’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 말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많았다.

1930년 총독부는 ‘조선지방제도개정령’을 통해 ‘府制’와 ‘邑制’를 실시하여 부와 읍은 의결기관인 府會와 邑會를 두고 자문기관으로 면협의회를 두도록 하였다. 의결기관으로서의 읍·부회는 그 권한도 상승하여 부는 부례를, 읍은 읍규칙의 제정·개폐를 논할 수 있게 되었고, 예산을 결정하고 채권의 발행도 논의할 수 있었다. 그 임기 또한 협의회 시기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다. 다만 부윤과 읍장은 각각 의결기관의 의장으로서 의결이 부당하다면 이를 취소하거나 재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에 의원들의 권한에는 강력한 제한이 존재하였다.³⁾

하지만 읍회와 부회는 제한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의 일본인과 조선인 지역엘리트에게 있어 총독부를 중심으로 한 통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였다. 일제강점기 지역엘

1) 「地方諮問機關」, 『東亞日報』, 1920.5.16.

2) 부협의회와 지정면에서 이루어진 선거와 관련된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독립생계를 영위하는 25세 이상의 남자로서, 1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연간 부세 혹은 면의 부과금 5원 이상을 납부하는 자로 한정되었다. 더불어 금치산자, 준금치산자 및 6년의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었다; 矢內原忠雄, 『植民及植民政策』, 有斐閣, 1926, 344~345쪽.

3) 김동명, 『지배와 협력』, 역사공간, 2018, 78쪽.

리트는 지역의 정치·경제 등 모든 측면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이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 읍·부회 등지에 참여하여 이를 통해 지역 내 개발의 방향성을 논의하였다.⁴⁾ 이처럼 읍·부회는 의원 선출 방식과 더불어 선출된 의원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 개입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 정치의 구현을 기대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일제강점기 읍·부회가 모두 구성되었던 지역 중 하나인 진주는 본래 도청소재지였음에도 1914년 당시 부로 지정되지 못하였다. 도청 또한 지역에서 꾸준히 반대운동을 전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24년 도청은 부산으로 이전되었다.⁵⁾ 이후 진주는 꾸준한 인구성장에 힘입어 1931년 진주군 진주면이 진주읍으로, 1939년 진주읍이 진주부로 승격하게 되었다. 진주는 경상도 내에서 부가 생겨난 1914년 이후 부로 승격한 유일한 지역이며,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부로 승격했기에 읍회를 통해 지역 내 입지를 유지하고, 부회를 통해 정치적 활동 공간을 넓히고자 한 시도를 확인하기에 용이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성이 진주부로의 승격과 읍·부회의 구성 및 운영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
- 4)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추고 활동한 이들은 연구마다 다른 이름으로 정의되어 왔다. 지수걸은 “재산, 학력, 당국 신용, 사회적 인망을 고루 갖춘” 지방유지가 관료-유지지배체제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이후 동선희는 재산과 함께 인적 연결망과 공공에 대한 헌신성을 가진 이들을 ‘지역유력자’로 정의하였다. 한편 박찬승은 지역의 정치·경제 등 모든 측면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이들을 ‘지역엘리트’로 규정하면서 이를 통해 유지와 유력자를 포괄하였다. 지역엘리트의 관점대로 당시 읍·부회에서 활동하던 조선인들도 당국과의 유착과는 별개로 사회적 신망을 지니거나, 전문직 종사자가 진출하는 등 정치과정을 통해 그 모습이 변동하는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이들을 지역엘리트로 정의하였다; 지수걸, 『일제하 충남 서산군의 ‘관료-유지 지배체제’』, 『역사문제연구』 3, 역사문제연구소, 1999, 14쪽; 동선희, 『식민권력과 조선인 지역유력자』, 선인, 2011, 172~173쪽; 박찬승, 「서론 - 연구의 목적과 방법론」, 『근대이행기 지역엘리트 연구』 I, 경인문화사, 2006, 13~20쪽; 주동빈, 「일제하 평양부 ‘개발’과 조선인 엘리트의 ‘지역정치’」,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5~6쪽.
- 5) 진주에서의 도청 이전 과정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것; 전성현, 「일제강점기 식민권력의 지방지배 ‘전략’과 도청이전을 둘러싼 ‘지역정치’」, 『사회와 역사』 126, 한국사회사학회, 2020.

끼쳤는지를 살펴보면, 지역 정치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이로써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정치사회화 과정과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 내 영향력 형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1930년대 이후 부회의 구성과 활동에 관련되어서는 손정목이 일제강점기 지방제도의 개정과 그 실재를 밝혔다.⁶⁾ 그 후로 김동명이 경성과 부산에서의 부회 구성과 지역 정치의 구현 사례를 정리하여 부회가 부당국에 일방적으로 협력하는 것만이 아닌 때로는 갈등하는 등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지역 정치가 행해졌음을 밝혔다.⁷⁾

김경남은 일제강점기 초기 전통적인 중핵 도시들이 부로 지정되는 것에서 제외되면서 신흥도시에 중심적 기능을 탈취당했다는 것을 논증하였다.⁸⁾ 홍순권은 1930년대 부산부회의 의원 선거 과정에서 전문직 등 다양한 사회계층이 부회에 진출하였음을 밝히면서, 부회 내에서 있었던 파벌 간 권력투쟁 양상을 다루었다.⁹⁾ 주동빈은 평양 지역에서 조선인 지역엘리트가 읍·부회를 통해 식민지개발을 주도하려고 하였던 것을 검증하면서, 전시체제가 자치 기구가 일제에 종속되는 과정을 그려내었다.¹⁰⁾

1930년대 부로 승격한 지역을 다룬 연구로는 김윤정이 함흥과 전주의 사례를 바탕으로 부회를 연구한 바가 있고, 윤현석은 광주부회의 운영 실태를 살폈으며, 천지명이 대전지역의 土地坪數割 실시 과정에서 대전부회의 역할에 관해 논하였다. 이들 중 김윤정은 부회의원의 활동을 통해 부회가 형식적인 기관으로만 운영되지는 않았으나, 부회가 결의기

6) 손정목, 『한국지방제도·자치사연구』 상, 일지사, 1992.

7) 김동명, 「1931년 경성부회 선거연구」,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6-2,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5; 「1934년 부산부회 조선인 의원 총사직사건 연구」, 『한일관계사연구』 48, 한일관계사학회, 2014; 앞의 책, 2018.

8) 김경남, 「1894-1930년 ‘전통도시’ 전주의 식민지적 도시개발과 사회경제구조 변동」, 『한일관계사연구』 51, 한일민족문제학회, 2015.

9) 홍순권, 「1930년대 부산부회의 의원 선거와 지방 정치세력의 동태」, 『지방사와 지방문화』 10-1, 역사문화학회, 2007; 『근대도시와 지방권력』, 선인, 2010.

10) 주동빈, 앞의 논문, 2023.

관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비판하였다.¹¹⁾ 진주의 경우에도 비슷한 시기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기관을 넘어 다양한 정치 활동이 수행되었다는 점과 함께 그 내부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이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 내용을 여러 사례로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진주를 중심으로 도시 내 지역엘리트로 구성되었던 읍·부회의 활동 양상을 살펴보고, 지역개발 논의 과정에 주축으로 참여했던 의원들의 구성과 활동을 통해 진주읍·부회의 특성과 변화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진주의 부 승격 전후 시기를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해당 시기 진주에서 주로 활동한 인물을 다루거나,¹²⁾ 지역의 현안 사업 중 하나였던 치수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연구 정도만이 존재하고 있다.¹³⁾

상기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장에서는 1930년대 초 진주읍의 구성과 진주읍회의 활동을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진주가 부로 승격하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1930년대 읍회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읍회에 참여하였던 인물들과 이후 부회와의 관계성을 조명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진주부회의 선거 과정과 이후 구성된 부회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살펴 당시 진주지역 정치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읍회와 부회가 지닌 도시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살피는 것으로써, 이를 위해 『東亞日報』, 『朝鮮時報』와 같은 각종 신문 및 조선총독부의 공문서를 주로 활용하였다.

11) 김윤정, 「1930년대 함흥부회와 전주부회의 구성과 활동」, 『사림』 60, 수선사학회, 2017; 윤현석, 「일제강점기 지방단체의 자문 및 의결기관 운영 실태 - 지방도시 광주(光州)를 중심으로」, 『도시연구(역사·사회·문화)』 11, 도시사학회, 2014; 천지명, 「일제시기 대전지역의 토지평수할(土地坪數割) 실시와 자문·의결기관의 역할」, 『동국사학』 77, 동국대학교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23.

12) 김경현, 『일제강점기 인명록 - 진주지역 관공리·유력자』, 민족문제연구소, 2015; 김희주, 「일제하 진주지역 鄭相珍의 성장기반과 유지활동」, 『동국사학』 64,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8.

13) 김희주, 「일제하 진주지역의 수해와 남강치수사업」, 『지역과 역사』 47, 부경역사연구소, 2020; 『일제하 진주지역의 민족운동과 진주사회』, 선인, 2021.

II. 진주읍회의 구성과 읍회의원 활동

진주읍회의 성격을 밝히기 위하여, 진주가 부로의 승격에서 제외된 사정과 경남도청의 이전 과정에서 읍회의원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1914년 진주가 부로 승격되지 못한 것은 조선총독부의 정책에 기인하였다. 총독부는 일본 거류민단의 소재지 혹은 일본인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을 부로 한다는 방침을 두었다.

그 결과 도청소재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 여럿 생겨났다. 그중 하나였던 진주는 1914년 행정제도 개편으로 인해 진주군 진주면이 되었다. 진주는 도청소재지였기에 指定面이 되어 보통면과는 다르게 면협의회 의원 선거로 선출할 수 있었다. 더불어 진주는 기존 전통 도시로의 입지를 기반으로 삼아 도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던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경남도청이 별다른 협의 과정 없이 부산으로 이전하고 지역에서는 이를 막지 못하게 되면서 지역 내적으로 도시의 발전에 있어서 부정적인 상황이 계속되었다.

특히, 경상남도청의 부산 이전은 해당 가능성이 처음으로 제기된 1909년부터 진주지역 내에서 이전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등 위기감이 지속되고 있었다. 조선총독부에서는 도청 이전 정황과 관련된 진주의 문제 제기가 이루어질 때마다 이를 부정하면서 도청 이전이 없을 것이라 단정하였으나, 도청의 이전 발표 직전까지도 ‘전략적’으로 도청의 이전을 부인하여 해당 사안이 기습적으로 발표된 이후 진주 주민들의 큰 반발을 사게 되었다.¹⁴⁾

진주 주민들 그중에서도 면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과 깊게 연결되어 있었던 진주의 지역엘리트들은 도청이전반대동맹회와 같은 단체를 설립하거나, 청원서를 작성하여 이에 대응하였다. 하지만 조선총독부의 도청 이전 시도를 막을 수는 없었다. 그러자 이를 이끌었던 인물 중 하나였던 石井高曉는 도청 이전이 확정된 이후 진주 신사에서 권총으로 자살하기

14) 전성현, 앞의 논문, 2020, 80쪽.

도 하였으며, 후에 읍회의원으로 활동하는 鹽尻市市郎과 上原三四郎 등은 도청 이전 반대운동 대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였다.¹⁵⁾ 이처럼 도청 이전은 진주에게는 부정적인 상황이었지만, 진주 내부에서는 조선인과 일본인 지역엘리트가 진주의 현안에 더욱 집중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는데, 1937년 지역신문인 『南鮮公論』에서는 당시를 회고하면서 “內鮮人이 共히 그 쓰라린 경험에 의하여 공동전선을 취하여서 진주읍정에 전력하여 왔다.”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¹⁶⁾

이렇듯 진주에서 주로 활동하였던 지역엘리트의 활동은 지역의 현안을 제기하고 해결 방법을 조율할 수 있었던 읍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진주는 1931년 읍제의 실시에 따라 지정면에서 진주읍으로 승격하였는데, 읍에서도 이전 지정면에서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지방세 5원 이상의 납부자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부여되는 제한적인 선거를 시행할 권한이 있었다. 진주읍은 부로 승격하는 1939년 이전까지 총 세 번의 선거를 통해 읍회의원을 선출하였다. 읍회는 4년의 임기를 가진 의결기관으로써 세입출 예산을 규정하고, 읍면세 징수의 건을 논의하였으며, 읍면채 起債를 고려하는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읍회의 장인 읍장은 읍회의 의결을 거친 사안에 관한 의안을 발표하고 집행하여야 하였다.¹⁷⁾

물론 읍장의 권한은 여전히 막강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도지사의 지휘를 청하여 사안을 처리할 수 있었지만, 기존보다 의원의 권한이 상승하였다는 것은 알 수 있다.¹⁸⁾ 그러므로 이를 논증하기 위해 1930년대 지방제도 개정 이후 치러졌던 1930년대 진주읍회 선거결과와 이들의 활동을 확인한 후 진주읍의 부 승격 과정을 함께 검토하

15) 勝田伊助, 『晉州大觀』, 晉州大觀社, 1940, 41쪽.

16) 「晉州邑會의 道議選舉經緯를 ㄷ고」, 『南鮮公論』, 1937.6.25.

17) 동선희, 「일제하 경남 지역 조선인 읍회의원에 관한 연구 -1920~1945년의 지정면협·읍회의원-」, 『淸溪史學』 20, 청계사학회, 2006, 205~206쪽.

18) 전성현, 「일제강점기 ‘민의를 있는 바를 표현’하는 장소로서의 읍회와 그 한계 - 김해읍의 ‘지방통치’와 김해읍회」, 『지방사와 지방문화』 22-2, 역사문화학회, 2019, 48~50쪽.

고자 한다. 우선, 1930년대 진주읍회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1930년대 진주읍회의원 명단

구분 연도 (정원)	조선인		일본인	
	명단(선수)	당선 인원	명단(선수)	당선 인원
1931 ~1935 (14명)	姜汶鉉(1) 金甲順(1) 李章喜(1) 李豐永(1) 申鉉壽(1) 張成龍(1) 鄭圭鎔(1)	6명	間島佐七郎(1) 北川成三郎(1) 杉亭(1) 上原三四郎(1) 鹽尻庄市郎(1) 原田定造(1) 井上台藏(1)	6명
1935 ~1939 (12명)	姜汶鉉(2) 申鉉壽(2) 張成龍(2) 鄭圭鎔(2) 李炳堯(1) 黃漢喆(1)	6명	北川成三郎(2) 上原三四郎(2) 鹽尻庄市郎(2) 原田定造(2) 藤川國善(1) 長尾米賴(1)	6명
1939 (14명)	姜汶鉉(3) 李章喜(2) 金奉圭(1) 朴鎭見(1) 白李秀(1) 鄭大和(1) 鄭泰驥(1) 鄭貽永(1) 崔斗煥(1) 許龍伯(1)	10명	鹽尻庄市郎(3) 藤川國善(2) 長尾米賴(2) 上村重次郎(1)	4명

출처: 「地方自治制實施의 劈頭를 裝飾하는 各地總選舉結果」, 『每日申報』, 1931.5.22; 「朝鮮地方自治의 劃期的進展」, 『每日申報』, 1935.5.22; 「全朝鮮府·邑(十四府六十八邑)會議員選舉總戰果發表」, 『東亞日報』, 1939.5.24.

1930년대 진주에서 치러졌던 읍회 선거는 총 세 번이다. 해당 선거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1931년과 1935년 두 번의 선거에서는 읍회 정원의 절반을 조선인과 일본인이 나누어 가져갔음을 알 수 있다. 해당 결과와 관련해서 당시 지역에서는 일본인들이 정원의 절반을 초과하는 입후보자를 내지 않음으로써 조선·일본인 의원 양자의 정원을 동수로 맞춰 정치적 평화를 이루고자 함이었다는 의견도 제기된 바가 있으나,¹⁹⁾ 이는 일본인의 시각에서 선거 결과를 유리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그

19) 「晋州邑會의 道議選舉經緯를 듯고」, 『南鮮公論』, 1937.6.25.

령기에 해당 결과의 원인은 다음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 내에서 조선인 유권자가 더욱 많았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²⁰⁾

<표 2> 1930년대 진주읍 인구 및 유권자(단위: 명)

연도	인구				유권자		
	인구수	조선인 (비율)	일본인 (비율)	기타 (비율)	유권자 수 (비율)	조선인 (비율)	일본인 (비율)
1931 년	123,990	121,423 (97.93%)	2,535 (2.04%)	32 (0.03%)	523 (0.42%)	304 (58.13%)	219 (41.87%)
1935 년	133,680	130,604 (97.70%)	2,987 (2.23%)	89 (0.07%)	738 (0.55%)	미상	미상
1939 년	47,259	44,507 (94.18%)	2,732 (5.78%)	20 (0.04%)	883 (1.87%)	655 (74.18%)	228 (25.82%)

출처: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31·1935·1939; 「晉州邑議員 立候補自數」, 『東亞日報』, 1931.4.24; 「晉州邑 有權者 八百八十三名」, 『釜山日報』, 1939.4.23.

1930년대 조선인 유권자 수의 확대는 1939년 선거에서 더욱 큰 영향을 끼쳤는데 1931년 선거와 비교하자면 조선인 유권자가 68.8% 증가할 동안 일본인 유권자는 4.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수십 개의 표로 인해 당락이 결정되는 읍회 선거의 특성과 맞물려 조선인 당선자가 선출되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그 결과 1939년 읍회 선거에서는 조선인 의원이 정원 14명 중 10명을 차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해당 선거 결과는 이후 부회 선거에도 큰 영향을 끼친 만큼 상당한 의미가 있는 선거였다.

읍회 당선자 명단을 살펴보면 1930년대 진주에서 읍회의원으로 활동

20) 1935년 진주의 민족 별 유권자의 수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진주의 전체 인구수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던 점과 유권자가 증가하는 비율 또한 일정하므로 1935년의 조선인 유권자의 비율을 60~70%로, 그 인원을 443~517명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한 인물은 조선인 17명, 일본인 10명으로 총 27명이 확인된다. 조선인의 경우 그 수가 많은 만큼 다양한 인물의 면면을 볼 수 있는데, 申鉉壽의 경우 동아일보 진주지국의 기자이며, 鄭駘永은 해당 지국의 지국장을 지냈다.

이외에도 다수의 인물이 상업적인 활동을 통해 조선인 지역엘리트로 편입되었다. 일본인의 경우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전원이 상업과 깊이 관계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다수의 인원이 자금 융통을 위해 정기적으로 금전을 납부한 이들에게 추첨과 입찰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내어 준 無盡 회사인 晉州無盡이나, 진주금융조합 혹은 진주의 도로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사업에 중역으로 활동하였다.

이들 중 세 번의 선거에 모두 당선된 인물은 조선인으로는 姜汶鉉이, 일본인으로는 鹽尻市郎이 각각 유일하다. 姜汶鉉은 1919년부터 실업계에 투신하여 면사포 무역 상점을 운영하다가 자신의 이름을 딴 姜汶鉉商店을 열어 기존에 하던 무역뿐만 아니라 토지 및 건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것으로 사업을 확장하였다.

姜汶鉉은 이러한 사업의 확장을 통해 1940년에 이르러서는 재산을 상당히 축적하여 조선인으로서 연 5백 석 이상의 소작료 수입을 거두는 인물로도 소개되었다. 그는 지역에서도 읍에서의 시장 사용료 요금 인상에 문제를 제기하였던 진주상인대회의 의장으로 피선되어 활동하는 등 왕성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姜汶鉉은 1929년 면회 시기 최고 득표자로 진주면협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바가 있었고, 1931년의 선거에서도 최다 득표하였을 정도로 진주의 유권자로부터 신뢰받는 인물이었다.²¹⁾

鹽尻市郎은 진주무진에서 이사로 활동하였다. 진주무진에는 그 이외에도 間島佐七郎, 北川成三郎, 上村重次郎 또한 중역으로 활동하였다. 한편에서는 경남도청의 부산 이전 당시 도청 이전 반대운동 대회의 위원

21) 朝鮮經世新聞社, 『全鮮府邑會議員銘感』, 朝鮮經世新聞社, 1931, 213쪽; 「市場使用料問題로 晉州商人大會」, 『東亞日報』, 1935.4.23;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37·1939·1941; 勝田伊助, 『晉州大觀』, 晉州大觀社, 1940, 171~172쪽.

으로도 활동한 바가 있으며, 1935년 진주와 金泉 사이의 자동차 노선을 개척하면서 조선 자동차계의 선구자라고 평가받은 경력을 활용해 慶晉運輸의 이사로도 활동하였다.²²⁾

진주읍회 선거에서 두 번 이상 당선된 인물은 조선인으로는 張成龍(1931·1935년), 申鉉壽(1931·1935년), 鄭圭鎔(1931·1935년), 李章喜(1931·1939년)가 있고 일본인으로는 上原三四郎(1931·1935년), 北川成三郎(1931·1935년), 原田定造(1931·1935년), 長尾米賴(1935·1939년), 藤川國善(1935·1939년)이 있다.

조선인 당선자 중 張成龍과 申鉉壽는 사회운동가적인 측면이 보이고, 鄭圭鎔과 李章喜는 관직을 수행하다가 사업가로 전환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張成龍은 진주제일공립보통학교와 一新財團 진주일신여자고등학교 기성회 의원을 지내는 등 교육에 관심이 많았다. 이외에도 진주의사회관 및 부속병원을 신축하는데 기부하는 등의 사회활동을 하였다.²³⁾ 申鉉壽는 조선일보 진주지국장이 된 이후 1923년부터 백정 출신이 아니었음에도 백정 신분 해방 운동이었던 형평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형평사 설립에 이바지하였다. 그리고 동년 진주청년회를 조직하는 등 진주지역 사회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인물 중 하나였다.²⁴⁾

李章喜는 조선총독부로부터 군수로 임명되어 합천과 창녕군수 등을 역임하다가 1927년 관직에서 은퇴하였다. 이후 昆明水利組合長과 진주 금융조합장 등을 맡으면서 앞선 姜汝鉉과 마찬가지로 1940년 5백 석 이상의 소작료 수입을 거두는 인물로 소개되었다.²⁵⁾ 鄭圭鎔은 일제강점

22) 「慶南道廳移轉問題로 戰場化한 晉州一帶의 殺氣」, 『東亞日報』, 1924.12.12;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25·1927·1929·1935·1939·1942; 朝鮮經世新聞社, 『全鮮府邑會議員銘感』, 朝鮮經世新聞社, 1931, 212쪽.

23) 「晉州第一公普校 增級期成會組織」, 『東亞日報』, 1931.9.20; 勝田伊助, 『晉州大觀』, 晉州大觀社, 1940, 180~181·186~188쪽.

24) 김재영, 「일제 강점기 衡平運動의 지역적 전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253쪽.

25)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31;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1920·1921·192

기 이전부터 진주재판소에서 서기 및 번역관을 지내었다. 그는 병탄 이후에도 진주에서 서기로 재직했다. 이후에는 진주금융조합에서 평의원으로 활동하거나 대부업을 하는 産業相助社와 親睦社에 출자하고, 친목사에서는 대표로 활동하는 등 사업을 운영하였다.²⁶⁾

上原三四郎은 1904년 진주에 정착한 초기 이주민 중 한 명으로 사립 학교를 세워 진주 내 일본인 교육을 돕거나, 진주면장 및 도평의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에 깊이 관계하였다. 그리고 1924년 진주도청 이전 문제가 부상하자 도청이전반대동맹회의 실행위원장으로 추대되어 활동하는 등 지역의 중요한 인물이었다.²⁷⁾

原田定造는 1909년 진주에서 변호사로 개업한 것을 인연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上原三四郎과 마찬가지로 도청이전반대동맹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한 바가 있었고, 晉州合同運輸會社의 이사로 활동하면서 晉州自動車組合長도 역임하였다.²⁸⁾ 藤川國善은 진주금융조합에서 활동하였고²⁹⁾, 長尾米賴는 아버지 長尾長之助가 일군 양조와 장류를 제조하는 長尾商店의 재력을 물려받았다. 그는 지주로서 수해를 입은 곳에 소작료를 감해주고, 영구소작권을 주었다는 미담이 보도되는 등 사회활동에도 관심을 두었다.³⁰⁾ 해당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1926; 朝鮮人事興信錄編纂部, 『朝鮮人事興信錄』, 朝鮮新聞社, 1935, 529쪽; 勝田伊助, 『晉州大觀』, 晉州大觀社, 1940, 171~172쪽.

26) 「兼任裁判所書記 裁判所繙譯官補」, 『大韓帝國官報』, 1909.8.31.;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1910~1912·1937·1939·1942; 「各地金組總會」, 『東亞日報』, 1925.5.4.

27) 民衆時論社朝鮮功勞者銘鑑刊行會, 『朝鮮功勞者銘鑑』, 民衆時論社朝鮮功勞者銘鑑刊行會, 1935, 350쪽;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1921~1924.

28) 民衆時論社朝鮮功勞者銘鑑刊行會, 『朝鮮功勞者銘鑑』, 民衆時論社朝鮮功勞者銘鑑刊行會, 1935, 193쪽;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33·1935·1937; 朝鮮人事興信錄編纂部, 『朝鮮人事興信錄』, 朝鮮新聞社, 1935, 382쪽.

29) 「商業及法人登記」, 『朝鮮總督府官報』, 1927.8.3.

30) 「水害진 畝에 小作料를 全減 永久小作權까지도 주어」, 『朝鮮中央日報』, 1933.11.20;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33·1935·1937·1939·1941.

<표 3> 진주 다회 당선 의원 명단

연번	성명	선수	분류	주요 경력
1	姜汝鉉	3	상인	강문현상점
2	鹽尻庄市郎	3	상인	진주무진, 경진운수
3	藤川國善	2	상인	진주금융조합
4	李章喜	2	관리	합천·창녕군수, 진주금융조합장
5	北川成三郎	2	상인	진주무진
6	上原三四郎	2	관리	진주면장, 경상남도평의회의원
7	申鉉壽	2	사회운동가	조선일보 진주지국장
8	原田定造	2	변호사	진주자동차조합장
9	長尾米賴	2	상인	나가고상점
10	張成龍	2	사회운동가	진주일신여자고등학교 기성회 의원
11	鄭圭鎔	2	관리	진주재판소 서기 및 번역관

한편, 진주읍회는 주로 세금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했는데, 지역의 문제에 있어서는 읍의 장인 읍장과도 다투었다. 1932년 4월 진주읍회의 조선인 의원들은 당시 진주의 읍장이었던 桂登利藏에게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조선인 의원들은 먼저, 읍장이 面制 시대부터 8년 동안 읍 사업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그 예시로 市區 정리 과정에서 진행되었던 도로공사에 2~3명이 반대한 것을 수습하지 못해서 길이 완성되지 못한 일과, 부읍장이 사임한 지 1년이나 되었는데 그 후임을 선발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더불어 읍장이 조선인을 무시하면서 이를 바로 잡겠다고 22일에 자택에 의원들을 불러 사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뒤인 25일에 이를 모두 취소한다고 하는 등 이러한 읍장의 소집에는 응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³¹⁾

31) 「朝鮮人議員全部 邑會意에同盟欠席」, 『東亞日報』, 1932.5.3.

조선인 의원들은 동맹하여 4월 28일 오전 10시에 소집된 읍회에 결석하였다. 당시 읍회는 조선인 의원이 구성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이들의 불참은 읍회 휴회를 야기했다. 이는 조선인 의원이 결속해 읍장에게 항쟁한 사건으로 당시 상당한 이목을 끌었다. 읍회의 일본인 의원들도 이에 동조하여 기존 읍회의 안건은 처리하되 읍장에게 7월 내 사임을 권하고 사임하지 않는다면 의원 전부가 사임할 것을 결의하였다.³²⁾ 결국 1926년 5월부터 진주읍장으로 활동해 온 桂登利藏은 진주를 떠나 1932년 6월 울산의 읍장으로 부임하게 되었고, 진주에는 새롭게 磯野千太郎이 읍장으로 부임하였다.³³⁾ 이는 읍회의 견제 기능과 조일 의원 사이 협력의 정도를 알 수 있는 사례이다.

이후 진주는 도시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경제적인 발전도 이룩하면서 부 승격이 점차 고려되기 시작하였다. 본래 진주의 부 승격은 1937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농후하였다. 하지만 1936년 8월 진주에서는 남강의 제방이 무너지면서 “유사 이래 미증유의 홍수”로 기록된 홍수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달에만 사망자가 50명을 웃돌았으며, 실종자를 합치면 100명에 가까웠다. 침수 피해 또한 심각해서 5,000호 이상의 집이 파괴되어 2만 명 이상의 피난민이 발생하였고, 관공서 대부분도 물에 잠기면서 도시의 행정이 마비되었다. 그 피해액은 500~1,000만 원 사이로 추산되었다.³⁴⁾ 이러한 상황에서 부 승격과 같은 논의가 이루어지긴 어려웠고, 그 결과 부의 승격이 미루어지게 되었다.

진주의 홍수는 진주의 부 승격 보류뿐만 아니라 제방 파손에 관한 당국 책임론이 제기되는 계기가 되었다. 진주에서는 이미 5~10년 정도의

32) 「晉州邑長問題로 全議員이 結束」, 『東亞日報』, 1932.5.14.

33) 朝鮮人事興信錄編纂部, 『朝鮮人事興信錄』, 朝鮮新聞社, 1935, 40쪽; 『晉州大觀』에서는 桂登利藏가 사망하여 읍장이 변경되었다고 하나,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등지에서 桂登利藏가 진주읍장에서 물러난 뒤의 행적이 확인되는바 『晉州大觀』의 서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勝田伊助, 『晉州大觀』, 晉州大觀社, 1940, 5쪽.

34) 「府昇格을 앞두고 晉州市區大擴張」, 『東亞日報』, 1937.6.8; 김희주, 앞의 논문, 2020, 186~187쪽.

주기마다 홍수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이었고, 당장 1933년에도 홍수 피해를 심하게 겪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진주읍회의원들은 당장 8월 31일에 회의를 열고 남강으로 유입되는 하천인 나불천에 제방 축조를 건의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전 의원의 동반 사퇴를 결의하였다. 이에 총독부는 정무총감을 통해 진주의 수해 상황을 보고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당시 진주읍장이었던 山下正道가 남강의 치수 사업을 건의한 것을 수용하였다. 해당 사업은 1937년 착공되었다.³⁵⁾

이후 진주읍회에서는 도로 정비를 위해 5개년 계획을 세워 93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거나, 부제의 실시 이후 진주의 시구를 확장하기 위해 도동·내동·평거면 등의 인접 면과 협의하여 도동면의 전부와 대동면 주악리, 평거면의 신안, 판문, 유곡, 이현리 등을 편입하였다.³⁶⁾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진주읍의 부 승격 문제는 1939년 총독부의 예산 계상을 통해 1939년 10월 1일 시행하기로 확정되었다.

하지만 10월 1일이라는 시기로 인해 기존 읍회의원의 임기가 종료되었고, 승격을 앞두고 읍회의원 선거가 치러지게 되었다. 해당 선거는 부 승격 직후 이루어질 부회의원 선거의 잣대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였기에 지역에서도 격렬한 선거전이 예상되었다.³⁷⁾

해당 선거 결과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존의 1931년과 1935년 선거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이 의원의 절반씩을 차지했던 것과 다르게 조선인이 정원 14명 중 10명을 차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다수의 조선인 의원이 당선되는 등 당시 부 승격에 따라 지역의 조선인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현안을 해결해 줄 책임자로 같은 조선인 의원을 지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진주는 1939년 1만여 호, 4만 5천여 명의 인구를 갖춘 부로 승격되었다.

35) 김희주, 앞의 논문, 187~191쪽.

36) 「大晋州建設에 人口四萬을 目標로」, 『東亞日報』, 1937.11.4; 「晉州邑新年豫算 二十萬圓을 突破」, 『東亞日報』, 1938.3.31.

37) 「晉州邑義改選」, 『東亞日報』, 1939.3.14.

Ⅲ. 진주부로의 승격과 부회 활동의 좌절

그러면 1938년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된 이후 진주는 어떻게 행정적으로 변화되었고, 진주지역 정치와 그 핵심인 진주 부회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자. 가장 주목할 것은 1939년 진주군 진주읍이 진주부로 승격되었다는 점이다.

1939년 진주군의 진주읍은 진주부로 승격하였다. 일제강점기 행정구역상 부는 조선시대의 부와 그 이름은 같지만, 성격은 크게 다르다. 부는 1914년 부제 실시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데, 일제는 부의 구역에서 시가지를 형성한 곳과 장래에 시가지로 편입될 만한 곳 이외의 지역을 별도의 군으로 독립시켜 부를 농촌 지역과 분리된 시 행정구역으로 만들었다.

이는 일본인 주 거주지인 시가지를 중심으로 부를 재편하여 부를 일본인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함이었다. 진주의 경우에도 이전 도시 내 일본인 비율이 2% 정도에서 일본인의 수가 크게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 승격 이후 일본인의 비율이 5%로 증가하였다.³⁸⁾ 이에 따라 진주군은 진양군이 되어 진주부와 서로 분리되었다.

부로 승격한 진주는 곧바로 부회의원 선거를 준비하여야 했다. 진주부회의 정원은 27명이었다. 이후 선거 준비 과정에서 입후보한 여러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자신에게 표를 줄 것을 호소하였는데, 그 과정이 『東亞日報』와 부산에서 발행된 경제 정보 전문지인 『朝鮮時報』에 잘 드러나 있다.³⁹⁾ 그 내용은 <표 4>와 같다.

38)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39.

39) 『東亞日報』에서는 조선인 14명이, 『朝鮮時報』에서는 조선인 9명, 일본인 5명으로 총 14명이 자신의 의견 즉, 공약을 발표하였다.

<표 4> 진주부회 선거 후보자 공약 내용

연번	성명	공약	당선 여부
1	姜汶鉉*	- 자본가 유치를 통한 방적공장 설치 - 간이 학교, 직업소개소, 공동 숙박소, 의료기관 설치	당선
2	金奉圭	- 중소 상공업 진흥 및 공장 유치 - 주택난 완화 및 교육기관 확충	당선
3	金祥用	- 공공 도서관·공원·질옥·주택 설치 및 상하수도 완비 - 유락 이전 및 晋州橋 확장	당선
4	梁在榮	- 산업진흥 및 공장 유치 - 위생시설 및 초등교육 확충	당선
5	朴鎭見	- 부민의 복리증진 - 입학난 해결을 위한 소학교 증설	당선
6	白季秀	- 상공업 진흥, 수도, 진주교 확장	당선
7	徐相湜	- 균형적 발전을 위해 교육·위생 시설에 노력 -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의 전환	당선
8	鄭大和	- 각종 시설에 만전을 기하고, 산업 부분을 적극 장려 - 초등교육 확충 및 새로운 지역의 시설 완비	당선
9	鄭泰驥**	- 부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요구를 관철	당선
10	崔斗煥	- 公益質屋 설치 - 교육기관 입학난 완화책 강구	당선
11	崔志煥	- 사범학교 설립 촉진 - 자본가 진출 촉진을 통한 공장 유치 - 주택난 완화, 위생·교통시설 등에 노력	당선
12	韓又守	- 중소 상공업 진흥 및 교육 및 위생시설 확충 - 도시시설의 보편화를 위한 시장·공장 확장 - 유락 및 기생 券番 이전	당선
13	許龍伯	-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전환 - 상공학교 설치 및 부영주택 문제와 도시 계획 촉진	당선
14	黃漢喆	- 시가지계획령 심의 노력 - 초등교육 보급 및 공익질옥 및 부영주택 시설 건설	당선

1930년대 진주읍회·진주부회의 구성과 성격(노규선)

연번	성명	공약	당선 여부
15	大黒清太郎	- 도시 및 상공업 개발 - 상공회의소와의 제휴 관계 성립 - 지리·장내산 개발을 위한 농학교 확충과	당선
16	上村重次郎	- 시가지계획령 추진 - 도로 정비 및 비료 문제 해결	당선
17	長尾米賴	- 시가지계획령 자문 - 상공회의소 출범에 따른 협력관계 구축	당선
18	井上台藏	- 현대적 문화도시 건설 및 교통기관 정비 - 상공회의소 설립 및 제휴 관계 구축	당선
19	裴順亨***	- 위생시설 완비를 통한 부민 건강 증진 - 도시계획실시 - 격리병동·수도 설비 개선, 학교 내 체격 조사 개선	낙선
20	趙慶濟	- 부민의 식량 문제 해결 및 생산 도시화의 주력	낙선
21	後藤由馬	- 여론에 따라 公正無私한 부정 운영	낙선

* 「躍進大晉州の建設に吾等の重責 晉州府議候補者 姜文鉉」에서는 姜汶鉉의 이름이 姜文鉉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 「晉州府議立候補者프로필」에서는 鄭泰驥의 이름이 卿泰驥로 표기되어 있으나, “읍정 시대에 읍 의원으로 출마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오기로 보인다.

*** 「晉州府議候補者 意見紙上發表 (6)」에서는 裴順亨의 이름이 裴順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출처: 「晉州府議候補者 意見紙上發表 (1) 黃漢喆 君」, 『朝鮮時報』, 1939.10.26; 「晉州府議候補者 意見紙上發表 (2) 鄭大和 君」, 『朝鮮時報』, 1939.10.29; 「晉州府議候補者 意見紙上發表 (3) 上村重次郎 君」, 『朝鮮時報』, 1939.11.2; 「晉州府議候補者 意見紙上發表 (4) 大黒清太郎 君」, 『朝鮮時報』, 1939.11.5; 「晉州府議候補者 意見紙上發表 (5) 後藤由馬 君」, 『朝鮮時報』, 1939.11.9; 「晉州府議候補者 意見紙上發表 (6)」, 『朝鮮時報』, 1939.11.12; 「躍進大晉州の建設に吾等の重責 晉州府議候補者 姜文鉉」, 『朝鮮時報』, 1939.11.19; 「晉州府議立候補者프로필」, 『東亞日報』, 1939.11.19.

<표 4>의 내용과 같이 21명의 후보는 자신의 소신을 신문으로 발표하였다. 해당 내용에는 공약과 관계되지 않아 상당 부분 제외되었으나, 이미 의원을 경험해 본 이른바 선배 의원의 지도를 잘 따르겠다는 의견이나 부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그들의 요구를 관철하겠다는 의견도 심심

치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각 후보의 공약을 정리해 보자면 ① 교육기관의 확충, ② 상공업 진흥, ③ 미래 도시 계획, ④ 각종 시설의 설치, ⑤ 상공회의소 신설에 따른 협력관계 구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당시 진주는 인구의 증가에 따라 이들이 들어갈 초등교육시설의 부족 현상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학교를 증설하고, 임시로 사용할 간이 학교를 세우거나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사범학교 등이 고려되었다.

둘째로 진주부회의 후보자들은 당대의 진주를 소비도시로 정의하면서 진주의 경제구조가 서비스산업에 기대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들은 방적공장 등 각종 공장을 유치하고, 산업 부분을 장려함으로써 진주를 2차산업이 중심이 된 생산도시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 문제에 있어서는 시가지계획령이 가장 핵심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당시 후보자 중 한 명인 黃漢喆의 인식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과거의 시구 개정이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였다면 시가지계획령은 “완전히 영원불변의 근본적 결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⁴⁰⁾ 후보들은 계획령의 결정 과정에 적절한 자문을 함으로써 진주를 도로·교통기관 등을 개선했던 현대적 문화도시로써 계획하고자 하였다.

넷째 문제로는 도시 내 필요한 각종 부영 기관인 직업소개소, 숙박소, 공원, 질옥, 도서관, 주택뿐만 아니라 위생 문제 해결을 위한 상하수도 추가 설치와 격리병동 증설과 같은 의료기관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상공회의소는 한반도 내에서는 조선에 들어온 일본인 상인들이 설립한 상업회의소가 1930년 ‘조선상공회의소령’을 통해 변화한 것으로 이러한 상공회의소의 지구는 부의 구역에 의한다는 규정에 따라 부로 승격한 진주에 구성될 것으로 예정된 단체였다.⁴¹⁾ 상공회의소는 상공업과 관계하여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로 진주부회의 의원들과도 직·간접적으로 관계하는 기구였다.

40) 「晉州府議候補者 意見紙上發表 (1) 黃漢喆 君」, 『朝鮮時報』, 1939.10.26.

41)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조선상공회의소령』, 1930.5.10(검색일:2024.06.21.).

1930년대 진주읍회·진주부회의 구성과 성격(노규선)

이외에도 도시 내 기피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유곽이나 기생의 활동을 중개하였던 권번을 도시 바깥으로 이전하는 문제 등도 거론되었다. 이처럼 당시 진주는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 내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다양한 현안이 산재해 있었던 시점이었다.

이후 진주부회 선거는 1939년 11월 20일 오전 9시부터 부청 회의실에서 투표가 시작되어 같은 날 16시에 마감되었다. 결과는 21시에 발표되었는데, 유권자 총 1,252명 중 기권 911명, 무효표 8명이 발생하였고, 총 27명의 의원이 당선되었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1939년도 진주부회 선거 결과

연번	득표	성명	연령	직업	구분	비고
1	65	福島是	61	신문 기자	일본	
2	55	鹽尻市市郎	57	농업	일본	
3	48	大黒清太郎	38	약제사	일본	회계심사위원
4	46	金柱錫	43	양복상	조선	
5	46	長尾米賴	42	회사원	일본	
6	44	藤川國善	46	質業	일본	
7	43	許龍伯	29	회사원	조선	
8	43	李章喜	62	농업	조선	
9	41	白李秀	40	상업	조선	
10	38	徐相湜	34	기자	조선	
11	38	韓又守	34	상업	조선	
12	38	黃漢喆	39	회사원	조선	회계심사위원
13	37	鄭大和	32	회사원	조선	
14	37	金祥用	43	司法書士	조선	회계심사위원
15	37	鄭泰驥	45	藥種商	조선	

연번	득표	성명	연령	직업	구분	비고
16	37	姜汶鉉	38	회사원	조선	회계심사위원
17	37	梁在榮	47	농업	조선	
18	36	崔志煥	59	상업	조선	부의장
19	36	上村重次郎	64	상업	일본	
20	34	井上台藏	49	회사원	일본	회계심사위원
21	33	崔斗煥	47	변호사	조선	
22	33	朴鎭見	31	농업	조선	
23	28	金榮達	30	農園	조선	
24	26	孫錫龍	44	醫主	조선	
25	25	金奉圭	40	정미업	조선	
26	23	森松喜波	49	상업	일본	
27	22	鄭圭鎔	57	농업	조선	

출처: 「四府選舉戰告終 大田·晉州·全州·光州昨日一齊開票-晉州棄權多數 七名落選의 苦杯」, 『每日申報』, 1939.11.21; 「晉州第一回府會 副議長에 崔志煥氏」, 『東亞日報』, 1939.12.5.

1939년의 진주부회 선거는 직전 이루어진 1939년 진주읍회 선거에 비해 유권자의 수가 370명 정도로 급증하였다. 이는 부 승격에 따라 학교비가 부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것이 戶別稅에 가산되어 부세 5원 이상이라는 조건을 갖출 수 있게 된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부회 선거의 유권자 1,253명 중 조선인은 882명으로 70.39%를 일본인은 371명으로 29.61%를 차지하면서 직전 읍회 선거와 비교하면 조선인 유권자는 약 4%가 줄고, 일본인 유권자는 약 4% 증가하였다.⁴²⁾

그러나 이러한 변화로는 1930년을 거치면서 성장한 조선인 유권자를 압도하기는 어려웠다. 실제로도 전체 유권자 중에서 인구 상 절대다수인

42) 「晉州府議選舉」, 『東亞日報』, 1939.10.24.

조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미 상당하였으므로 다수의 조선인 의원이 배출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반면에 다수의 무효표 또한 발생하였는데, 이는 선거가 읍회 선거 이후 불과 몇 개월 만에 치러지면서 생겨난 피로감과 새롭게 유권자가 된 사람들이 투표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서 생긴 문제로 사료된다.

당선자 결과를 살펴보자면 우선, 읍회 시기에 이어 부회에 당선된 인물을 찾아볼 수 있겠다. 이들 중 조선인으로는 許龍伯, 李章喜, 白李秀, 鄭大和, 鄭泰驥, 姜汶鉉, 崔斗煥, 朴鎭見, 金奉圭, 鄭圭鎔이 있고, 일본인으로는 鹽尻庄市郎, 長尾米賴, 藤川國善, 上村重次郎, 井上台藏이 있었다. 특기할 만한 점은 이전 1939년 진주읍회 선거에서 당선된 14명의 인물은 鄭貽永을 제외하고 전부 부회의원으로 다시금 당선되었다는 것이다.

그중 井上台藏은 1909년 경상농공은행에 입사한 후 1918년 조선식산은행이 창립되자 해당 은행의 다양한 지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이후 그는 조선식산은행을 퇴사하고, 진주무진 창립에 기여하면서 전무이사가 되었고, 이후 진주지점장으로도 활동하는 등 은행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경력을 찾을 수 있다.⁴³⁾

이전에 당선 이력이 없는 경우 중 조선인 의원의 경우 지역에서 개인 사업에 힘쓰고 있던 協成商會 사장 崔志煥이나 양복점을 운영하던 金柱錫 등이 새롭게 보인다. 특이한 점은 일본인 의원의 경우인데, 이전 읍회 시기 당선된 의원 전체가 상업과 관계하고 있었다면 화재 방지를 위해 조직되었던 경방단에서 꾸준히 활동해 온 福島是나,⁴⁴⁾ 묘목재배 사업과 경남도 산림종묘조합 조합장으로 주로 활동한 森松喜波와 같이 사회사업에 주로 참여한 인물들도 당선되었다.⁴⁵⁾ 이는 부회 시기에 이르러 의원 정족수 자체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상업과 연계한 인물 이외에

43) 民衆時論社朝鮮功勞者銘鑑刊行會, 『朝鮮功勞者銘鑑』, 民衆時論社朝鮮功勞者銘鑑刊行會, 1935, 516~517쪽; 朝鮮經世新聞社, 『全鮮府邑會議員銘感』, 朝鮮經世新聞社, 1931, 211쪽;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41.

44) 勝田伊助, 『晉州大觀』, 晉州大觀社, 1940, 194~195쪽.

45) 勝田伊助, 『晉州大觀』, 晉州大觀社, 1940, 173~175쪽.

도 다양한 인물들이 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진주부회에서는 앞서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논의한 도시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교육기관의 확충이었다. 1940년 교육기관 확충을 공약한 사람 중 한 명이었던 金奉圭는 같은 부회의원 金柱錫, 崔斗煥과 함께 진주 부윤이었던 大林福夫를 방문하여 학급 증가를 진정하였다.⁴⁶⁾ 그리고 동월 부회에서의 회의를 통해 藤川國善 의원은 부윤에게 물가가 폭등했는데, 교육예산이 격감한 것은 어떠한 이유인지를 질의하였다. 그리고 덧붙여 학교에 이러한 불합리한 예산이 배정되면서, 학교 당국에서는 학부모에게 부족한 예산을 기부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는데, 그 결과 소학교 지정 기부금을 기존 삼백 원에서 천원으로 증가시켜 이를 추가 예산으로 두기로 합의하면서 부회는 폐회하였다.⁴⁷⁾

다음으로 진주의 당면 과제 중 하나는 부 승격으로 인한 상공회의소 구성 문제였다. 진주에서는 상공회의소 설치를 합의하고, 영업세 50원 이상 납세자 40명, 법인단체 13개가 발기인회를 개최하고, 발기인 대표 10명을 선정하였다.⁴⁸⁾ 이후 1940년 7월이 되어 상공회의소 의원 선거를 치러 총 504표 중 유효표 463표, 기권표 32명, 무효표 9표로 20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⁴⁹⁾ 그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6> 1939년 진주상공회의소 의원 선거 결과

연번	득표수	구분	당선자	비고
1	34	개인	鄭泰驥	
2	31	합자회사	清水合資會社	· 이사 長尾米賴
3	31	개인	北川成三郎	

46) 「晉州府會議員이 蹴起」, 『東亞日報』, 1940.2.2.

47) 「晉州府第一教育部 豫算會開催」, 『東亞日報』, 1940.3.28.

48) 「商議創設을 協議 晉州서 四十餘名이 會合」, 『東亞日報』, 1939.11.12.

49) 「晉州商議 當選者發表」, 『朝鮮日報』, 1940.7.14.

1930년대 진주읍회·진주부회의 구성과 성격(노규선)

연번	득표수	구분	당선자	비고
4	30	개인	白季秀	
5	30	개인	趙三世	
6	26	개인	間島佐七郎	
7	26	개인	朴起用	
8	25	개인	鈴木卯之吉	
9	23	주식회사	晋州合同印刷	· 대표 許龍伯 · 이사 黃漢喆, 姜汶鉉 · 감사 申鉉壽
10	23	개인	張斗南	
11	23	합자회사	晋州合資釀造會社	
12	20	주식회사	姜汶鉉商店	· 대표 姜汶鉉
13	20	주식회사	長尾商店	· 대표 長尾米賴
14	20	주식회사	建興館	
15	19	개인	岡弘祐	
16	18	합자회사	三二商會	· 대표 鄭大和
17	15	개인	梁在榮	
18	15	개인	崔斗廷	
19	15	개인	韓又守	
20	11	개인	金柱錫	

* 진하게 처리한 부분은 부회의원 본인이거나, 회사의 중역으로 부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경우임.

출처: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37·1939·1941; 『晋州商議 當選者發表』, 『朝鮮日報』, 1940.7.14.

해당 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당시 회사 이름으로 당선된 곳이 7개, 개인으로 당선된 사람이 13명이다. 이들 중 절반에 해당하는 10개의 의원

이 부회의원 본인이거나, 의원이 중역으로 참여하고 있는 회사인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당선인도 北川成三郎와 間島佐七郎은 1930년대 읍회의원으로 당선되어 활동한 경력이 있다. 부회의원의 경우 출마한 鄭泰驥, 白李秀, 梁在榮, 韓又守, 金柱錫은 자신의 이름으로 출마하였고, 鄭大和는 자신이 대표로 있었던 합자회사 三二商會의 이름으로, 姜汶鉉과 長尾米賴는 각각 자신의 이름과 성을 딴 姜汶鉉商店과 長尾商店으로 출마함과 동시에 姜汶鉉은 晉州合同印刷, 長尾米賴는 淸水合資會社의 이사로써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었다. 진주합동인쇄에는 姜汶鉉 이외에도 許龍伯이 대표로, 黃漢喆이 이사로, 申鉉壽가 감사로 중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長尾米賴의 경우 상공회의소와의 협력관계 구축이라는 자신의 공약을 스스로가 상공회의소 의원으로 당선되면서 달성하였다. 당시 진주의 경제는 부 승격이라는 상황과 함께 크게 성장하여 1940년 걷힌 개인세만도 32,700여 원으로 이전 해와 비교하면 3할 이상이 증가한 상황이었다.⁵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공회의소는 이러한 진주의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조력해야 하는 기구였지만, 총독부에 의해 전시체제기 상공업자를 지도해 조성하고, 국가적 경제기관의 첨병으로서 활동하기를 강요받으면서 별다른 활약을 하지는 못한 채 진주 내 상공업에 기반을 둔 지역엘리트의 회합 기구 혹은 영향력을 공고히 하는 기구 정도로만 이용되었다.⁵¹⁾

한편에서는 진주의 미래 도시 계획을 위한 시가지계획이 부회에서 검토되고 있었다. 1940년 4월 20일 진주부에서는 부회를 개최하고, 시가지계획을 시행할 구역과 그 과정에서 추진될 토지의 구획 정리를 위해 장시간 동안 회의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총독부에서 설계한 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어 이후 8만 명 이상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진주를 구상하였다. 이는 상기하였듯이 1939년 당시 진주의 인구가 4만여 명이었

50) 「晉州個人營業稅激增」, 『東亞日報』, 1940.6.22.

51) 조재곤, 「전시체제기 상공회의소와 상공경제회」, 『한국학논총』 57,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2, 408~409쪽.

으므로 현재의 인구 두 배 이상을 수용하기 위한 도시 계획이었다.⁵²⁾

이후 진주에서는 진주부 토목과를 중심으로 도로를 정비하고, 부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도로를 건설하고, 토지를 측량하였다.⁵³⁾ 이는 부회의원에게 있어 공약을 실천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권을 통해 지역 내 영향력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다. 그 과정에서 지역엘리트는 총독부가 계획한 사업의 방향에는 크게 간섭하지 않으면서 지역 내 주요 지역의 개발을 이루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 또한 일제의 패망으로 인해 토지 구획 정도에 머무르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룩하지는 못하였다.

이처럼 1939년 구성된 진주부회는 공약을 밝힌 진주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경제·도시 계획 문제를 다루었다. 그 과정에서 소기의 성과를 얻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은 장기간 추진되어야 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중지되고 만다. 가장 큰 원인은 1941년 일제가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하는 등 전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전시체제 또한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총독부는 전시체제를 운영하기 위해 물자 보급의 안정 등과 같은 목적을 이루고자 지역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선거 방식을 ‘추천 선거’로 일괄 변경한다. 추천 선거는 이전 읍회 시기부터 구축되어 온 조일의원 사이의 협력관계는 물론이고, 지역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내기 힘든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뜻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전시 총동원 체제에 따르기 위해 지역에 부과된 총독부의 여러 정책을 방어할 만한 수단이 지역에는 없었기에 이후 1939년 당선되어 1943년 임기를 마친 진주 부회 1기는 1943년 2기 선거에 이르러 추천 선거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추천 선거의 과정을 통해 당선된 부회의원은 지역에서 비롯된 과제보다는 전쟁 수행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였고, 부회는 이를 선전하는 기구로 변질하고 만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진주의 현안은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⁵⁴⁾

52) 「大晉州 “都計”案 廿日府會서 原案決定」, 『東亞日報』, 1940.4.23.

53) 「工費五萬圓을 計上 府內道路를 整備」, 『東亞日報』, 1940.5.11.

54) 김동명,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 식민지 참정권의 전개」, 『일본학보』 73, 한국일본

1939년 부로 승격한 진주에서는 다양한 배경을 갖춘 지역엘리트가 진주의 발전과 함께 그 발전을 통한 자신의 이익 증대를 위해 도시 내 정치적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부회를 선택하였다. 부회에 입성하고자 한 지역엘리트는 자신이 지역 발전에 책임자임을 유권자에게 알리기 위해 신문을 통해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였고, 당선된 이후에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활동하였다. 지역엘리트는 해당 과정을 통해 지역에서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영향력을 확장하면서 지역사회의 주요 인물로 자리 잡았다. 물론 부회에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활동이 가능했던 시기는 전시체제의 확대와 강화로 인해 매우 짧은 시기로 한정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지역엘리트의 주요 활동은 지역의 발전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과 지역민 또한 이들을 통해 의사를 당국에 전달하고자 하였다.

IV. 맺음말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진주는 조선시대 전통 도시이자 도청소재지였다. 비록 일제강점기 이후 도로 교통상의 이유로 도청은 부산으로 이전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진주는 도시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고, 도시 자체적으로도 꾸준히 성장을 이룩하였다. 그 결과 진주는 1930년 읍으로, 1939년에는 부로 승격하였다. 그사이 진주의 도시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던 읍·부회에서는 진주의 지역엘리트가 주로 참여하면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자 하였고, 도청 이전이라는 상황을 공통으로 경험한 진주의 의원들은 읍회를 통해 자신의 지역적 위신을 높이고, 지역 내 정치력을 강화하여 도시 내에서 활발히 활동하였다.

이러한 내용에 관한 예시로 진주읍 시기에 읍회의원들은 특정한 계기가 마련되자, 읍장의 권한을 부정하고, 조선인과 일본인 의원들이 서로

학회, 2007, 313~314쪽.

연합하여 의원의 사무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활동을 통해 당국에 읍장이 교체되도록 압력을 넣었고 이를 관철하는 데 성공한다. 한편으로는 지역이 수해로 인해 큰 피해를 입게 되자 주민들의 대표로 해당 재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당국에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도 앞장섰다.

이러한 경향은 부로 승격하는 과정과 그 이후에도 계속되어 부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이들은 자신과 조선총독부와와의 관계성을 설명하기보다 지역엘리트로 지역의 현안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물로 자신을 소개하였다. 부회 선거 이후 당선된 이들은 후보 시절 자신이 제시하였던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신문을 통해 여론을 모으거나, 부회에서 부윤에게 사안을 질의하는 것을 통해 의정활동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결정 과정은 신문이라는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지역민의 이목을 끌기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이 가능하였던 이유는 1930년대 진주의 읍·부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결의권의 영향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한계도 명확했는데 지역의 장인 읍장과 부윤의 권한이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여 의안을 발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에 깊이 개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시의 읍·부회는 당국의 지방통치 과정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해당 과정에 참여한 의원들이 결국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 순응하고, 편승하였다는 것도 타당한 해석이다.

다만 앞서 살펴본 내용으로 알 수 있듯 읍·부회의 의원들은 해당 공간에서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정치적 활동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이는 지역엘리트로 하여금 자신의 지역적 이해를 실현하기 위한 공간으로 읍·부회가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지역엘리트들은 총독부의 지역개발이라는 정책을 집행하는 첨병이면서도 그 과정에서 비교적 총독부의 영향력이 적은 위치에서 자신의 지역 영향력을 유지하고 확대하였다.

그렇기에 그 과정에서 추진된 사업 대부분은 지역엘리트 자신을 포함하고 이러한 자신을 선출해 준 유권자에게 필요한 것이 우선 추진되었

다. 그 사례가 바로 상업회의소 구성과 시가지계획령 추진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영향력 구축은 총독부의 전시체제 강화로 인해 중앙의 힘이 지역으로 강하게 집중되면서 총독부가 ‘허락한’ 공간 위에서 구현되었던 지역엘리트의 영향력을 빠르게 소멸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의 영향력이 중앙의 강력한 힘에 종속되었고, 지역엘리트 중에서는 일제의 전시체제를 적극적으로 선전하는 이들이 다수 나타난다. 더불어 해방 이후에는 지역 내에서 큰 영향을 끼치던 일본인이 소멸하면서 협력체제가 붕괴한 위에서 지역 내 재편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를 통해 진주의 사례와 같이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일정 기간 조일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던 과정과 이후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의 전개 양상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점은 향후 지역의 정치와 지역엘리트의 역관계를 연구할 때 중요한 지점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된다. 더불어 향후 해당 경험이 해방 이후 지역에서 어떻게 계승되고 변화하는지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 이 논문은 2024년 08월 2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08월 27일부터 09월 1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09월 13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사료

民衆時論社朝鮮功勞者銘鑑刊行會, 『朝鮮功勞者銘鑑』, 民衆時論社朝鮮功勞者銘鑑刊行會, 1935.

勝田伊助, 『晉州大觀』, 晉州大觀社, 1940.

矢内原忠雄, 『植民及植民政策』, 有斐閣, 1926.

朝鮮經世新聞社, 『全鮮府邑會議員銘感』, 朝鮮經世新聞社, 1931.

朝鮮人事興信錄編纂部, 『朝鮮人事興信錄』, 朝鮮新聞社, 1935.

『南鮮公論』 『大韓帝國官報』 『東亞日報』 『每日申報』 『釜山日報』 『朝鮮時報』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朝鮮日報』 『朝鮮中央日報』 『朝鮮總督府官報』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朝鮮總督府統計年報』

○ 단행본

김경현, 『일제강점기 인명록 - 진주지역 관공리·유력자』, 민족문제연구소, 2015.

김동명, 『지배와 협력』, 역사공간, 2018.

김희주, 『일제하 진주지역의 민족운동과 진주사회』, 선인, 2021.

동선희, 『식민권력과 조선인 지역유력자』, 선인, 2011.

박찬승, 「서론 - 연구의 목적과 방법론」, 『근대이행기 지역엘리트 연구』 I, 경인문화사, 2006.

손정목, 『한국지방제도·자치사연구』 상, 일지사, 1992.

홍순권, 『근대도시와 지방권력』, 선인, 2010.

○ 학위논문

김재영, 「일제 강점기 衡平運動의 지역적 전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주동빈, 「일제하 평양부 ‘개발’과 조선인 엘리트의 ‘지역정치」,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 학술논문

김경남, 「1894-1930년 ‘전통도시’ 전주의 식민지적 도시개발과 사회경제구조 변

- 용], 『한일관계사연구』 51, 한일민족문제학회, 2015, 225~279쪽.
- 김동명, 「1931년 경성부회 선거연구」,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6-2,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5, 193~218쪽.
- ,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 식민지 참정권의 전개」, 『일본학보』 73, 한국일본학회, 2007, 309~326쪽.
- , 「1934년 부산부회 조선인 의원 총사직사건 연구」, 『한일관계사연구』 48, 한일관계사학회, 2014, 351~381쪽.
- 김윤정, 「1930년대 함흥부회와 전주부회의 구성과 활동」, 『사림』 60, 수선사학회, 2017, 261~297쪽.
- 김희주, 「일제하 진주지역 鄭相珍의 성장기반과 유지활동」, 『동국사학』 64,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8, 333~378쪽.
- , 「일제하 진주지역의 수해와 남강치수사업」, 『지역과 역사』 47, 부경역사연구소, 2020, 179~212쪽.
- 동선희, 「일제하 경남 지역 조선인 읍회의원에 관한 연구 -1920~1945년의 지정면협·읍회의원-」, 『淸溪史學』 20, 청계사학회, 2006, 191~212쪽.
- 윤현석, 「일제강점기 지방단체의 자문 및 의결기관 운영 실태 - 지방도시 광주(光州)를 중심으로」, 『도시연구(역사·사회·문화)』 11, 도시사학회, 2014, 69~120쪽.
- 전성현, 「일제강점기 ‘민의를 있는 바를 표현’하는 장소로서의 읍회와 그 한계 - 김해읍의 ‘지방통치’와 김해읍회」, 『지방사와 지방문화』 22-2, 역사문화학회, 2019, 41~77쪽.
- , 「일제강점기 식민권력의 지방지배 ‘전략’과 도청이전을 둘러싼 ‘지역정치」, 『사회와 역사』 126, 한국사회사학회, 2020, 59~94쪽.
- 조재곤, 「전시체제기 상공회의소와 상공경제회」, 『한국학논총』 57,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2, 401~432쪽.
- 지수걸, 「일제하 충남 서산군의 ‘관료-유지 지배체제」, 『역사문제연구』 3, 역사문제연구소, 1999, 13~75쪽.
- 천지명, 「일제시기 대전지역의 토지평수할(土地坪數割) 실시와 자문·의결기관의 역할」, 『동국사학』 77, 동국대학교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23, 257~297쪽.
- 홍순권, 「1930년대 부산부회의 의원 선거와 지방 정치세력의 동태」, 『지방사와 지방문화』 10-1, 역사문화학회, 2007, 333~382쪽.

○ 기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main.html>).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index/index.do>).

Abstract

Composition and Characteristics of Jinju Eup-council and Jinju Pu-council in the 1930s

Noh, Gyu-se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activities of the Eup-Council and Pu-Council, which were composed of local elites in Jinju, and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es in these councils by examining the composition and activities of lawmakers who primarily participated in regional development discussions. Although the activities of the Eup-Council and Pu-Council were often limited and formal under the ruling system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the cooperative system between Koreans and Japanese in Jinju developed over a relatively long period. During this time, the Eup-Council and Pu-Council addressed regional issues and curtailed the formal operation of these organizations. The summary is as follows:

First, Jinju's status as a traditional city was threaten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is threat became more pronounced after it failed to be designated as a Pu and after the relocation of the Gyeongnam Provincial Office from Jinju to Busan in 1924. As a result, not only Koreans who had lived in Jinju for a long time, but also Japanese who were primarily active in the city, cooperated actively to oppose the relocation of the provincial government office. This incident served as a catalyst for establishing a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Koreans and Japanese in the region. In the Eup-Council formed afterward, as regional development became an urgent task,

Korean and Japanese lawmakers, composed of local elites, established a cooperative relationship to address regional issues.

Second, Jinju was promoted to Pu status in 1939 due to its growth, and local elites who were elected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Pu-Council to fulfill their pledges. However, due to the reinforcement of the wartime system, efforts to pursue regional development gradually disappeared. Additionally, the election system of the Pu-Council, which had been relatively close to an ‘autonomous’ institution under the Government-General, was changed to a recommendation system, thwarting cooperation between Korean and Japanese lawmakers and stalling regional development efforts. The elected lawmakers transformed the Pu-Council into an organization that supported and promoted the Japanese war effort.

keywords :

Jinju, Eup-Council, Pu-Council, local politics, local elites

